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보도자료

배포일 | 2026년 4월 2일 | 담당자 | 박선원 의원실 신동일 보좌관 (010 3823 1911)

계엄 직후 윤석열·김주현 13분 독대·장기독재 구상 실체 밝혀야

- “계엄 직후 민정수석 독대, 반대세력 처벌을 위한 ‘국가안전관리법’ 구상 지시 가능성”
- “노상원 수첩은 망상이 아니라 계엄 이후 통치 청사진이자 장기 지배 시나리오의 흔적”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간 ‘13분 독대’의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회견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발적 상황이나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조직적 내란 기도”라고 규정하며,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장기적 사전 기획 정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난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간 독대에 대해 “국회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이 발표되던 시점과 맞물려 있어 단순 보고로 보기 어렵다”며, “반대세력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 이른바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지시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는 해당 법 구상이 과거 유신 체제의 국가보위법, 신군부의 입법 통치 방식과 유사하다며 ‘계엄을 통해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통치 장치를 구축하려 한 장기독재 기획’이라고 지적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도 ‘사후 수습이 아니라 공모 및 증거인멸, 나아가 2차 계엄 시도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정황’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선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 고 한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대해 “내란의 실체를 축소하고 장기 사전기획을 간과했다” 고 비판하면서, “군 인사, 사령관 회동, 국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계획 등 일련의 흐름은 결코 충동적 사건으로 설명될 수 없다” 고 밝혔다.

특위는 특히 ‘노상원 수첩’ 에 계엄 이후 구상으로 적힌 국가안전관리법, 선거 제도 개편, 국회·정치 개혁 운운하는 구체적 표현들이 ‘망상이 아니라 실제 작전과 지시, 정치 일정과 맞물린 핵심 증거’ 이며 ‘계엄 이후 통치 청사진이 담긴 문서’ 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김주현 전 수석 소환 및 구속 수사 △삼청동 안가 회동 전원 조사 △노상원 수첩 작성·전달·실행 연계성 규명 △장기 사전기획 실체 재판을 통한 확인 등을 2차 특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위는 끝으로 “내란은 실패했지만 그 의도와 구조를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공화국을 위해 국가가 진실로 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끝>

붙임 : 기자회견문

윤석열과 김주현의 13분 독대!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는가?

12.3내란의 장기독재 구상!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특위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우발적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계몽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몇몇 군 지휘관의 일탈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 공화국을 뒤집으려 한 조직적 내란 기도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계엄의 징후를 경고해 왔고, 그 이유는 계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민이 결국 이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2차 특검 추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지난해 내란특검을 통해 일정 부분 진상이 밝혀졌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밝혀야 할 부분이 상당수 남아있습니다. 특히 조희대의 법원에서 영장을 상당수 기각함으로써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고, 특검의 출범에 맞춰 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틀전 JTBC 뉴스룸에서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13분간 독대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시점은 계엄 선포가 이뤄지고, 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의 포고령이 발표되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단순한 보고나 통상적 대화로 보기 어려운 매우 중대한 시간입니다. 내란특검은 독대의 성격에 대해 윤석열이 당시 김주현 수석에게 반대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 이른바 ‘국가

안전관리법’ 제정 등을 지시했을 것이라 합니다.

이른바 ‘국가안전관리법’ 구상은 유신의 국가보위법,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식 통치 논리와 닮아 있다고도 했습니다. 계엄으로 국회를 짓누르고, 반대세력을 처벌하고, 입법 질서를 우회하는 별도의 통치 장치를 만드는 것은 장기독재 기획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반대세력 숙청의 근거를 만들고, 위헌적 통치장치를 설계하고,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후 공모와 증거인멸, 그리고 2차 계엄 시도 가능성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안가 회동 참석자들의 역할과 이후 행적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내란의 전모는 1,100여쪽에 달하는 법원의 1심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지귀연 판사는 내란특검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때부터 군을 동원할 환경에 들어섰다는 취지로 판결문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계엄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수없이 많이 진행된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핵심 사령관들의 회동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 판사는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전 군 인사, 핵심 사령관 회동, 방첩사와 경찰의 협업 구조, 국회와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계획, 사후 문건 정리와 안가 회동, 그리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구상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결코 이틀짜리 충동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준비가 허술했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저항이 거셌고, 국회가 살아 있었고, 현장 군인들과 경찰 일부가 끝까지 완전한 불법 명령 수행을 주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준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

서 내란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의 실체를 축소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막아낸 내란의 중대성을 오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은 갈수록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은 절대로 괴이한 망상의 메모가 아닙니다. 그 안의 내용은 실제 작전, 실제 인사, 실제 지시, 실제 체포 계획, 실제 정치 일정과 여러 지점에서 맞물려 왔습니다. 계엄 이후 구상으로 적힌 국가안전관리법, 선거제도 개편, 국회·정치 개혁 운운하는 표현들은 단발성 ‘경고성 계엄’ 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계엄 이후의 통치 청사진이며, 장기 지배 시나리오의 흔적입니다. 언론과 특검 수사 결과도 노상원 수첩을 내란의 진짜 목적과 구조를 보여주는 핵심 단서로 다뤄 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확보하고 기록해온 자료에서도, 노상원 수첩은 실제 준비와 실행의 흐름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반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수첩의 한 줄 한 줄이 뜬구름 잡는 공상이 아니라 구체적 목표였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 2차 종합특검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첫째,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13분 독대 내용과 국가안전관리법 지시 여부를 전면 재수사해야 합니다. 김주현을 즉각 소환 조사하고 법과 증거에 따라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

둘째, 삼청동 안가 회동의 참석자 전원에 대해 내란 공모, 사후 은폐, 증거인멸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점과 전달 경로, 실제 실행 연계성을 특검이 끝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지귀연 재판부가 축소한 ‘장기 사전기획’ 의 실체를 항소심과 후속 재판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12.3 내란은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아직도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도 책임이 다 묻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내란은 실패했지만, 내란의 의도와 구조를 끝까지 밝히지 못하면 언젠가 다른 얼굴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김주현, 노상원, 그리고 그 주변 법률·행정·군 지휘 라인에 이르기까지, 누가 무엇을 준비했고, 누가 어떤 문서를 만들었으며, 누가 어떤 처벌 법제를 구상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과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란을 우발로 축소하는 자는 내란을 돕는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을 망상으로 치부하는 자는 내란의 설계도를 지워주려는 것입니다. 김주현의 13분을 사소한 독대로 넘기려는 자는 내란의 법률 공범 구조를 덮으려는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국가는 진실로 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